

영암 다시 시작이다

3 극심한 운영미숙·혼선

■ 영암 F1 향후 대회 어떻게 치르나

내년 10월 14~16일...최장 12년 개최

올 개최권료 360억 매년 10%씩 증가

사사건건 불협화음...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조직위·KAVO·전남도 '따로 업무' 기능 분담...전남도 주도적 역할 해야

#1.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 중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지역 인기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AFOS 대회가 갑자기 취소됐지만 주최측인 KAVO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KAVO는 애초 대회 개최 분위기를 띄우겠다며 F1 대회 기간 중이 행사를 계획했다.

반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왜 없어졌는지 이유는 모르겠다"고만 했다.

#2. 공짜표인 자유이용권을 들고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

전을 보기 위해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관람객들이 2시간 넘게 항의하며 기다리던 23일, 주최측은 안내는 커녕 우왕좌왕하며 허둥대기 일쑤였다.

특히 주최측은 혼선을 빚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스탠드는 안된다", "다른 스탠드는 가능하다", "공짜표로 왜 여길 오느냐"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책임을 미뤘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와중에

발생한 '불통', '혼선'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를 두고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회 운영 전체를 아우르면서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일체가 돼야 할 같은 식구 간의 소통 부재마저 겹치면서 F1 대회를 '기대 이하'로 평가하는 지역민들도 많다.

◇'따로 따로' 불통 시스템 = 전남도는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기업인 KAVO, 전남도 등으로 나눠 업무를 분담했다.

예컨대 KAVO는 ▲대회개최를 위한 운영인력 양성 ▲수익사업(입장권

판매·스폰서십 유치 및 TV중계권 확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경주장 건설 및 경주장 사후활용 등 운영 업무를 전담토록 했고, 조직위는 ▲홍보 및 대외협력 ▲교통·숙박·수송지원 등 관람객 수용대책 ▲치안·의료 등 공공서비스 ▲관광객 안전서비스 대책 수립 등을 맡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F1대회지원분부를 두고 ▲KAVO 지원 및 관리 ▲경주장 건설지원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문제는 이같은 분담 체계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는 커녕, 각 부서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돼 종합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KAVO와 조직위원회, 전남도 간 불협화음은 대회가 다가오면서 더욱 심해졌다. 조직위원회 및 전남도에서는 "KAVO와 전화 한 번 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아니라 KAVO에게 물어봐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KAVO의 업무를 전남도와 조직위가 사실상 떠맡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전남도와 조직위원회가 KAVO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민감한 부분은 "KAVO가 하는 일"이라며 떠넘기는 경우가 빚어졌고 수익사업 대부분을 떠안은 전남도는 결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티켓 할당, 기업 및 협력사 강제 등에 나서면서 구실수에 올랐다.

◇전남도,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 F1 대회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컨트롤 타워(지휘탑)' 기능이 공백상태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각 부서로 분산돼 있는데다, 통합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정보 공유나 협조 체계가 미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KAVO의 최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끌려다니거나 수수방관,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따라서 현안이 터질 때마다 관련 부서가 소통 부재나 미흡으로 떠넘기거나 '엇박자'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는 향후 어떻게 치러지고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은 어떻게 활용될까.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orld Motor Sport Council)는 2011년 한국대회를 10월 14일부터 3일간 치르기로 했다. 한국 대회는 싱가포르(9월 25일), 일본(10월 9일)에 이어 17번째로 열리게 되며 내년에는 인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올해보다 1개 대회가 늘어나 역대 최다인 총 20개 대회로 펼쳐진다.

F1대회는 통상 격주로 열리지만 대회가 20개로 늘어남에 따라 1주일 단위로 연이어 열리는 횡수도 올해 3차례에서 내년에는 4차례로 늘어나 선수들과 F1팀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모두 7년간 연이어 대회를 치르게 되며 최초 계약 과정에서 원할 경우 '5년 연장 가능'조건을 달아 최장 12년간 대회를 치르는 게 가능하다.

전남도는 개최를 위해 올해에만 360억원의 개최권료 지불했고 ▲2011년 400억 ▲2012년 437억 ▲2013~2016년 2233억 등 모두 343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러나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5년 연장할 경우에는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억원의 개최권료를 지불하는 만큼 전남도는 다양한 경주장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성우오토모티브가 다음달 6~7일 '2010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현대차는 13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초로 영암 서킷에서 신차발표회를 갖고 이 기간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20~21일에는 CJ 티빙닷컴 슈퍼레이스 대회가 펼쳐진다.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국제대회인 F3 코리아 슈퍼프리(Fomula3 Korea Super Prix)도 다음달 26일부터 28일 까지 진행된다.

F3는 F1, GP2와 함께 포뮬러 자동차경주의 주축을 이루는 종목이다.

전남도 F1 지원본부 관계자는 "경주장을 연간 200일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와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겠다"면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경주대회, 전남 드래그레이스 등 각종 국내 대회를 유치해 경주장 수익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열린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중 체육관에서 개요요원들이 개요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심 외면한 민주당 오만 심판

광주 서구청장 재선 결과와 향후 전망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김종식 후보의 당선과 민주당 후보의 '부진'은 광주 민심의 '민주당 심판'으로 해석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한데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비민주 야 4당 후보에게까지 밀리고 1, 2위와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가 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외면한 민심 = 우선 광주 민심이 철저하게 민주당 후보를 외면한 채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한 공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방적인 분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를 민주당이 다시 공천한 것은 지역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비쳐지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 가산점 논란과 막판 예비후보 끼워넣기 등의 논란도 지역 민심이 민주당 후보에 등을 돌리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 특성에 따라 지역 민심이 정치적 판단보다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일꾼을 선택한 점도 민주당 후보의 패배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2만여 명의 서구의 민주당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주당 후보에게 고개를 돌렸다는 점에서도 민심 이반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종식 후보는 '행정은 행정 기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후폭풍 불기 = 민주당 후보가 핵심 정치적 기반인 광주 주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당함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호의 새로운 선장으로 취임한 손학규 대표는 자신이 공천한 후보는 아니지만, 취임 이후 첫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그것도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에서 아픔이 두 배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공천을 관리했던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공심위(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당내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영택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두 번의 서구청장 선거 패배는 두 사람의 지역구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 및 영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김선옥 후보가 측근으로 뽑혔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개표 초반 조 의원의 텃밭인 서구 갑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김종식 후보와 서대석 후보에게 득표율이 5~10% 가까이 뒤처진 것도 조 의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광주 민심의 '민주당 심판' 파급 효과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파급한 변화와 혁신적인 공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광주 민심의 '심판'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 패배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안이한 공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흐트러진 공식사회 바로 잡는데 주력"

김종식 서구청장 당선자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서구민에 당선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는 27일 "그동안 흐트러진 서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책임을 주신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이 같은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서라도 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과 비민주 야 4당 지도부들까지 대거 서구로 내려와 지원유세를 해 사실 선거운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가 당선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라며 모든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그는 또 "구청장 자리가 6개월 이상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전임 청장의 비리로 공식사회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정비해 공무원들이 오직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25년간의 행정경험과 중앙부처의 인맥을 총동원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 서구 발전을 위해 힘을 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 양극화로 더욱 어려워진 노인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의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지금부터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구청 운영에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창립 1주년 기념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금융대동맥

KoFC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금융대동맥이 되겠습니다.

G20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를 약속합니다. 2010.11.11~12

www.kofc.or.kr 150-8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Tel. 02-1644-4100